



2020.05.27

국회미래연구원 | 2020년도 연차보고서

2020년도 연차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이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도 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작년 5월말에 제2대 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후 1년 만의 결실이라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2020년에는 미래연구원 연구사업을 내부 연구진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한 ‘기본연구’, 기관의 설립목적인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연구’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중심인 ‘조사연구’로 구분하여 수행했습니다. 2020년도 연구과제 보고서 수는 40개에 이릅니다. 본 연차보고서에서는 각 과제별로 핵심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제시했습니다. 더 상세하게 연구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께서는 미래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발간은 연구수행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 측면에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미래연구원의 연구활동은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성과확산, 정책소통까지 포괄합니다.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보면, 연구 결과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미래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외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제전략 Foresight」 등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년 8월부터 수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행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이나 카드뉴스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SNS 홍보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과 공동 세미나 방식 등을 통해 성과확산과 정책소통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연구보고서와 본 연차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각 연구그룹의 연구진과 연구기획팀 구성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미래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조언이 연구활동에 반영되어 양질의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Contents

I	국회미래연구원 소개	설립목적	8
		연 혁	8
		조직 및 정원	9
		비전, 목표 및 전략추진체계	10
<hr/>			
II	주요 연구성과	20년도 연구사업 및 연구방향 소개	14
		기본연구사업부문(14개 연구과제)	16
		중점연구사업부문(21개 연구과제)	16
		조사연구사업부문(3개 연구과제)	17
		20년도 주요 연구내용(보고서)	18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20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2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22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자원조달체계 연구	23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24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25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26
		디지털전환에 따른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27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	28
		가상화폐의 파급효과와 정책 대안 연구	29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30
		중국의 미래 : 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의 미래를 중심으로	31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유엔 PKO·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	32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33
	이머징 이슈 분석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 연구	34	
	통합적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변화 예측	35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36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37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 코로나19 이후 세계	38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39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40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41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과학기술 부문	42
국회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43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44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45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46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47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 과제	48
국가의 민주적 질 제고를 위한 개혁	49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50
혁신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5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52
한국의 불평등 연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53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 :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54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55
생애주기에 따른 한국인 남녀의 노화 연구 : 생체 적응 부하 지표를 중심으로	56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57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공론조사	58
한국인의 행복조사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59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60**

국가미래전략 Insight	60
국제전략 Foresight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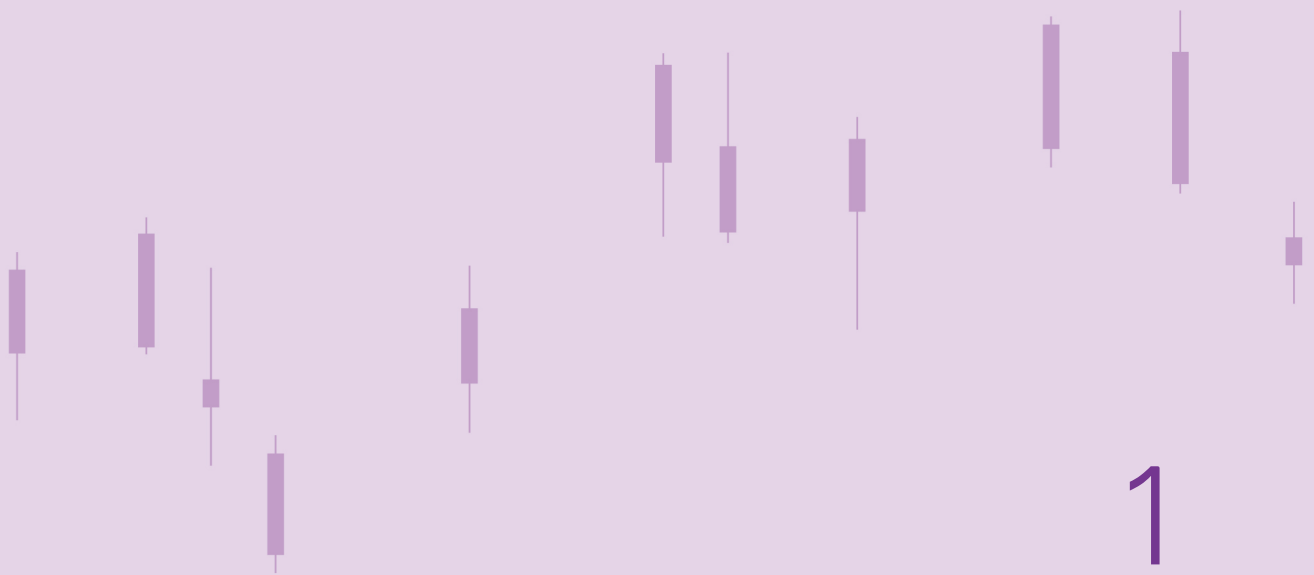
III 연구 외 활동

주요행사	68
기고문	72
언론보도	76

IV 부록

국회미래연구원 2021년 연구과제 목록	80
-----------------------	----





1

국회미래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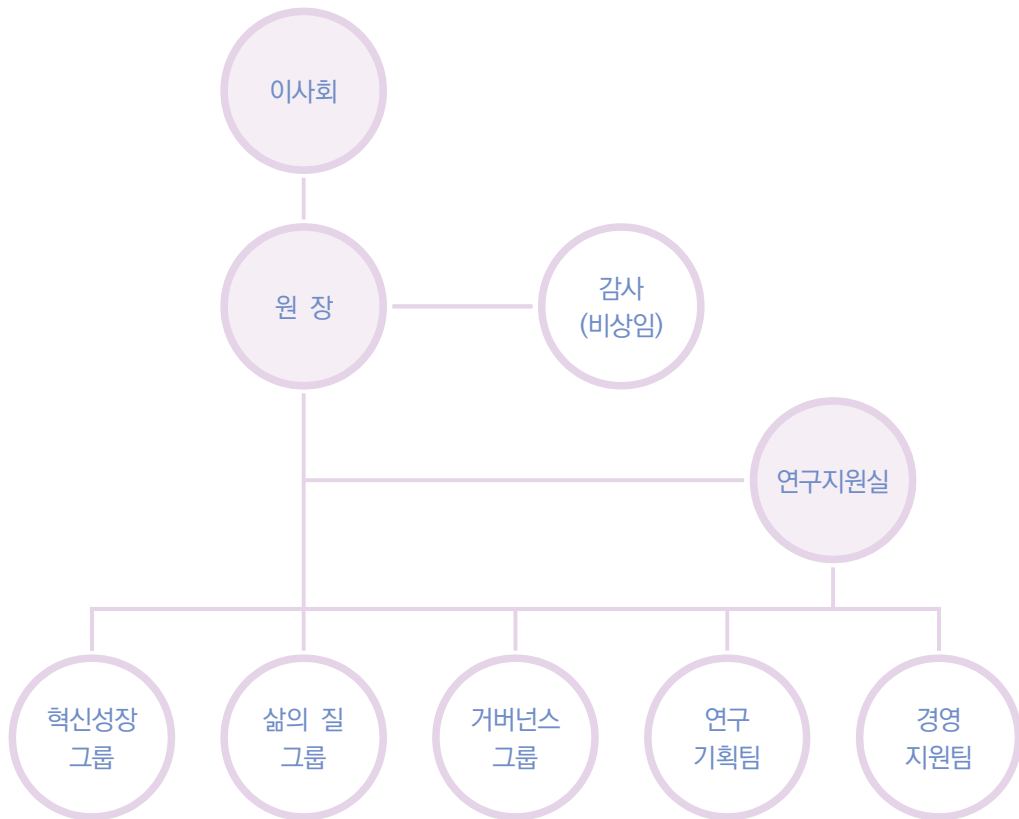
2. 연혁

주요 연혁

- '14. 12월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15. 3월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공청회
- '15. 7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동법안 논의
- '15.10.12.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동법안 논의
- '17.03.13.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국회운영위원회 제출
- '17.11.24. 동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17.12.12. 「국회미래연구원법」 공포
- '18.01.10.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위원장: 조동성)
- '18.03.21.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구성(이사장: 김선욱)
- '18.05.21. 국회운영위 초대원장(박진) 임명동의안 가결
- '18.05.28.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 '19.05.24.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19.09.03. 국회미래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20.05.20. 국회운영위 제2대 원장(김현곤) 임명동의안 가결
- '20.05.26.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
- '20.05.27. 국회의장 제2대 원장 임명(임기시작일 '20.05.30)
- '20.07.02. 국회미래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MOU 체결
- '20.11.06.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20.11.12. 국회미래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포럼 개최
- '20.11.27.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장 자문기구) 위촉식 개최
- '20.12.24. 국회미래연구원 제2대 이사회 구성(이사장: 박명광)

3. 조직 및 정원

조직도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에 연구 분야 명시

: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원

(2021년 5월 기준)

구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계
정원(명)	1	17	4	22

※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 및 비정규직 제외 정원 기준

4. 비전, 목표 및 전략추진체계

미션·비전·목표

MISSION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

VISION

국가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3대
경영전략

1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2

미래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및
정책활용도 제고

3

조직역량 제고 및
경영체계 선진화

경영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1-1. 미래변화의 과학적 예측·분석 및
국민참여형 국가미래상 제시

1-2. 국가미래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① 과학적 예측을 통한 미래 아젠더 발굴 강화
- ② 바람직한 국가미래상 제시
- ③ 핵심 국가아젠더 중심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④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대응력 강화

2 미래연구 플랫폼 역할 강화 및 정책활용도 제고

2-1. 미래연구 교류·협력 및 플랫폼
역할 강화

2-2.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정책활용도 제고

- ⑤ 국내 연구네트워크와 시너지 제고
- ⑥ 글로벌 전문기관·전문가와 협력 강화
- ⑦ 국회·정부·국민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⑧ 매체 다변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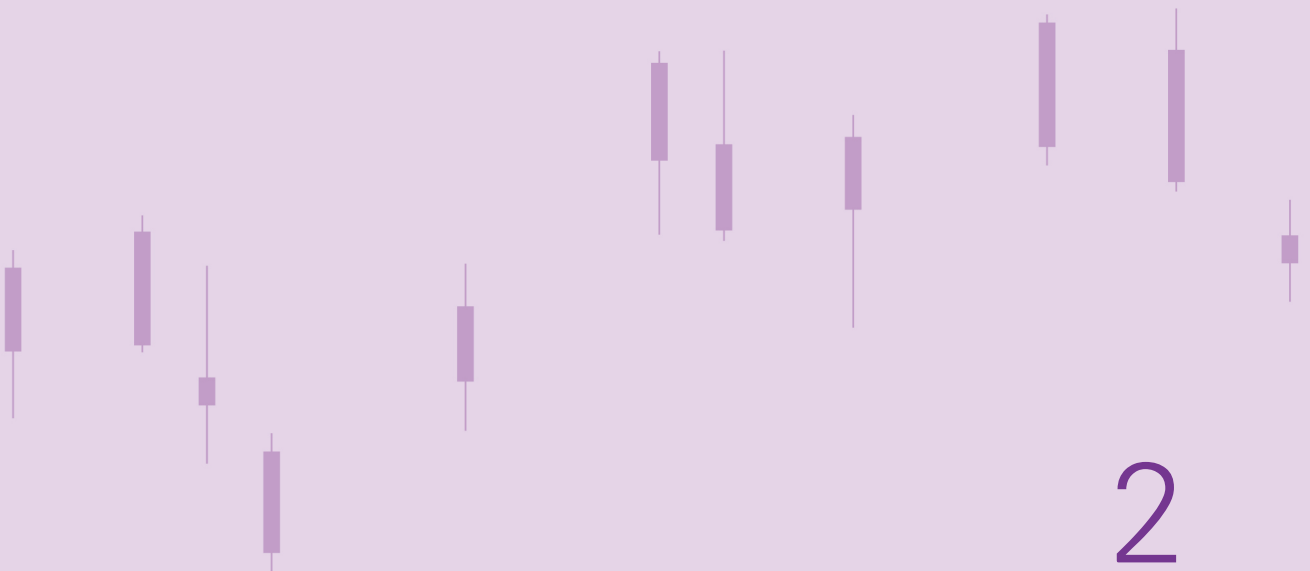
3 조직역량 제고 및 경영체계 선진화

3-1. 인적역량 강화 및 조직역량 제고

3-2. 연구활동체계 혁신 및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

- ⑨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기관 인재상 추구
- ⑩ 인적규모 확대와 인적교류 플랫폼 활성화
- ⑪ 기관미션 중심의 연구활동체계 혁신
- ⑫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





2

주요 연구성과

1. 20년도 연구사업 및 연구방향 소개



『 미래 환경변화 예측·분석, 국가중장기발전전략 도출, 국회 정책역량강화 』

사업부문	기본연구	중점연구	조사연구
기본 방향	연구그룹 별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분야 중심의 융합연구	핵심 연구주제에 대해 내외부 역량을 집중하여 연구	조사, 설문 중심의 연구를 통해 예측 데이터 축적 및 DB 구축
20년 사업 주요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기후, 행복, 지속가능, 사회정책, 미래 인구변동 ▪ (혁신성장) 도시전략, 4차산업혁명, 심리/사회 자본 ▪ (거버넌스) 가상화폐, 초고령화, 국제전략(중국, 국제기구, 한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예측) 이머징, AI, 기술영향, 성평등, 감염병 ▪ (정책평가)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 (국회역량) 국회의 미래, 정당공동연구 ▪ (장기발전) 거버넌스 개혁 과제 ▪ (심층주제) 불평등(정치, 경제,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선호가치 ▪ 미래정책 공론조사 ▪ 한국인의 행복조사
세부연구과제	14개 연구과제	21개 연구과제	3개 연구과제

연구 기반 사업

내부 역량강화(세미나, 교육, 학술활동 지원 등), 연구 성과 홍보,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기본연구

- 이론적·학술적·정책적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적 연구사업
- 삶의 질, 혁신성장, 거버넌스 연구그룹별 소속 연구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 관련 분야별 이슈 및 대응 방안 연구
 - (삶의 질) 행복·환경·인구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각 분야별로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과제와 준비를 탐색하는 연구 추진
 - (혁신성장) 각 분야별로 혁신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준비를 탐색하는 연구 추진
 - (거버넌스) 향후 안정적인 국내외 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준비를 탐색하는 연구 추진

중점연구

-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사업단위로 묶어 해당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 미래 중요도가 높은 핵심 주제를 발굴하여 연구진이 소속 그룹에 구애받지 않고 내외부 연구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 연구 수행
 - (미래영향예측) 이머징 이슈, 인공지능, 젠더 등 미래동인 및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관련 예측 및 대응 방안 연구 추진
 - (정책평가) 행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기술영향평가를 메타평가하여 행정부의 미래대비 역량을 향상
 - (국회역량 강화) 국회 내 의원실, 보좌진, 정당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 (장기발전전략 제도화) 정부조직, 재정관계, 경제 및 사회정책 등 개혁과제에 대한 제도화 방안 제시
 - (불평등) 한국 사회불안의 주요 배경인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연구로서 불평등의 배경을 탐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조사연구

- 국민,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공론조사 및 데이터 수집·축적
- 미래연구로부터 생산되는 예측 데이터, 조사/설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내외부 관련 연구의 활용성 제고
 - (선호조사) 청소년 계층이 원하는 미래에 대한 선호체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 설계에 참고 및 미래모습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물어 현 시점에서의 정책결정에 판단 자료로 제시
 - (행복조사)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등 향후 국가대표성을 갖춘 체계적·지속적 행복조사 연구를 대비한 예비조사 실시

연구기반사업

-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원내 세미나 개최, 연구간행물 발간, 국제협력, 성과확산, 기타 연구 관련 내외부 위원회 운영

기본연구사업부문 : 14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 삶의 질	1-1-1. 기후변화 미래사회영향 대응 전략수립 기반연구	김은아
	1-1-2. 대한민국 행복지도 2.0 연구	민보경
	1-1-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민보경
	1-1-4.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이채정
	1-1-5. 출생코호트를 고려한 대안적 인구추계	허종호
2. 혁신 성장	1-2-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시전략	김은아
	1-2-2.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전략 연구	성문주
	1-2-3.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여영준
	1-2-4.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	성문주
3. 거버넌스	1-3-1. 가상화폐의 파급효과와 정책 대안 연구	박성준
	1-3-2.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박성준
	1-3-3. 중국의 미래: 중국 CPC(Communist Party of China)의 미래연구	유재광/박상훈
	1-3-4. 한국의 국제기구(IGOs) 거버넌스 연구	유재광/박상훈
	1-3-5. 한중일 복합갈등의 미래	박성준

중점연구사업부문 : 21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 미래 영향 예측	2-1-1. 이머징 및 돌발이슈 분석 연구	김유빈
	2-1-2. 통합적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변화 예측	박성원
	2-1-3.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김유빈
	2-1-4.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김유빈
	2-1-5. 사스부터 코로나 19까지 세계적 감염병 이후 미래사회 예측	박성원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2. 정책 평가	2-2-1.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이채정
	2-2-2.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기후변화 분야	김은아
	2-2-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성문주
	2-2-4.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과학기술 부문	여영준
3. 국회 역량 강화	2-3-1. 국회의 미래 : 국회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박상훈
	2-3-2. 국회의원의 미래 : 신뢰받는 의원이 되려면 어떤 말과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박상훈
	2-3-3. 정치의 미래 :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박상훈
	2-3-4. 미래협치 실현을 위한 정당정책연구소 공동연구	박상훈
4. 장기 발전 전략 제도화	2-4-1. 국가의 민주적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조인영
	2-4-2.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방안: 정부 경직성 지출을 중심으로	이선화
	2-4-3. 혁신패러다임 전환 위한 산업정책 역할 재정립 및 거버넌스 재구축 연구	여영준
	2-4-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이채정
5. 불평등	2-5-1. 한국의 불평등 연구	조인영
	2-5-2.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 :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조인영
	2-5-3.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 및 조세정책의 과제	이선화
	2-5-4. 한국인 남녀의 생애 건강격차 연구	허종호

조사연구사업부문 : 3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 선호조사	3-1-1.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연구	민보경
	3-1-2. 미래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연구	박성원
2. 행복조사	3-2-1.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예비조사)	허종호

2. 20년도 주요 연구내용(보고서)

발간번호	연구보고서명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20-0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자원조달체계 연구
20-05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20-06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20-07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20-08	디지털전환에 따른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20-09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
20-10	가상화폐의 파급효과와 정책 대안 연구
20-11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20-12	중국의 미래 -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의 미래를 중심으로-
20-13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유엔 PKO·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
20-14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20-15	이머징 이슈 분석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 연구
20-16	통합적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변화 예측
20-17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20-18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20-19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 코로나19 이후 세계
20-20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20-21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20-2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20-23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과학기술 부문
20-24	국회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20-2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발간번호	연구보고서명
20-26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20-27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20-28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20-29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 과제
20-30	국가의 민주적 질 제고를 위한 개혁
20-31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20-32	혁신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20-3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20-34	한국의 불평등 연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20-35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 :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20-36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20-37	생애주기에 따른 한국인 남녀의 노화 연구 : 생체 적응 부하 지표를 중심으로
20-38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20-39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공론조사
20-40	한국인의 행복조사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연구책임자 | 김은아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 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중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연구책임자 | 민보경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 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 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 민보경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연구책임자 | 이채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인간의 직무를 기술이 대체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의 계산대는 무인단말기로 대체되었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직무대체에 의해 늘어나는 빈곤층에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로 유발되는 노동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 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자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연구책임자 | 허종호

인구추계는 대한민국 미래 예측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오차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추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인구추계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점은 출생코호트 효과(출생연도에 따른 사망, 이동, 출생의 차이)를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e.g. 연령보정법)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출생코호트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 효과를 직접 산출하여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Age-Period-Cohort(APC) 분석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사망률, 출생률, 이동률의 추계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동이 없는 외국인 여자의 출국 추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서 코호트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률과 이동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직접 규명하고 인구추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기존의 한계인 완전 공선성의 문제를 극복한 모델링을 실증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은 APC 분석을 토대로 건강정책의 관점에서 출생코호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 김은아

선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지향적인 도시 성장 및 기후변화는 지금보다도 더 지속가능성이 약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질 향상, 경제성장, 사회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회·경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 및 노하우가 필요하며,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활용될 구조화된 '정보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순환경제 전환전략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의 구성요소와 전환의 동력이 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개념적 토대 위에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연·사회·경제환경과 사회기반 정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고 몇몇 해외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와 해외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UN-SDGs, K-SDGs)를 참고하여 국내 지역순환경제 전환 모니터링에 활용할 신규 성과지표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지역순환경제가 발전적인 모델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지역이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 환경 요소를 분석하고 (지역환경 프로파일링), (2)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3)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 후보를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책임자 | 성문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및 전략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증진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자본에 대한 관점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에 대한 총체적·균형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자본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진단 결과, 이들 자본의 수준에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학부과정)이 심리자본 수준 및 사회자본 수준과 대체로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 전반과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일부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본의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 수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를 학습자의 생애주기별·교육 부문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과제의 예로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평가 체제의 변화, 실제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연계 강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증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교육정책 과제가 포함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 및 대학 구성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학생들의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긍정심리 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성인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접근성을 향상과 일터에서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지원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각 교육부문별 여러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연구책임자 | 여영준

초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생산현장, 기업 및 산업 간 관계, 노동시장, 가계소득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이 미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을 경고하는 비관론적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는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진보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기 요인을 예측하고, 잠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모형 기반 실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내재적 속성을 내재화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별 증장기 파급효과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양상에 따른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CGE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 및 기술과 노동 간 대체에 따른 기술변화의 편향성 확대는 산업구조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포용적 발전(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체제 내 재직자들의 숙련향상 및 과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는 경우, 더욱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하고, 경제체제 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전환 시대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 기반 미래 예측을 넘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경제모형 기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

연구책임자 | 성문주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인적자본 중심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능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전생애적 학습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체제의 영역을 크게 아동·청소년 교육(초·중·등교육 분야), 성인 직업능력개발(고등교육 및 계속교육 분야), 성인 평생교육(고등교육 및 성인 교양교육 분야) 영역으로 나누고, 미래 평생학습체제 내에 해당 영역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경험과학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과제 및 도전과제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의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평생학습 역량을 비롯한 전생애 역량관리를 위한 역량진단 체제 구축, 아동·청소년기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학습자에게 개별화가 가능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유연화가 정책 주요과제로 도출되었고,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평생학습 능력 계발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이와 연계되는 대입제도 개혁이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둘째, 성인 직업능력개발 영역인 고등교육 및 계속교육 분야에서는 개인 학습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상자의 참여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재정비, 온라인 및 재택 비대면 훈련의 증가가능성에 따른 공공·민간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이 정책 주요과제로 도출되었고, 공공부문에서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지원,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적자원개발서비스 지원, 취약계층의 훈련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마련이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성인 평생교육 영역인 고등교육 및 성인 교양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법이 정부 전체의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재정 확보, 평생학습 참여 형평성 제고, 노인교육의 제도화가 정책 주요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국가주도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위험 인식,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 역할과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복잡계적 공간으로서의 평생학습체제의 생성에 주목, 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의 체계적 제공, 보편적 권리로써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가상화폐의 파급효과와 정책 대안 연구

연구책임자 | 박성준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하였던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8년 상반기에 가격이 급락하면서 상당수 투자자가 이탈하고 관심도 줄어들었으나, 2020년 하반기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성격, 가치, 미래, 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리·감독과 같은 제도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적 이슈를 연구하였다. 제1장에서는 먼저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분산원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의 가격 급등과 관련된 이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제기된 제도적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는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정리하였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진 전통적인 전자결제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며, 보안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화폐가 아닌 위험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 내의 유동성, 불확실성, 투자자 심리, 규제 발표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의 속도가 느리고, 비트코인의 채굴에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익명성은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데, 이러한 거래는 블록체인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이 낮아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며, 실제로 큰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측면의 정비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협력,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 마련,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연구책임자 | 박성준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양상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이미 상당수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운영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먼저, 통계 및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기초연금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복지 분야 주요 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정분권 이론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을 살펴본 뒤, 중장기 시야에서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이양과 공유, 기능과 사무 권한의 지방 정부로의 이양과 조정, 국가 재정자원의 재배분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세입 자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전재원(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분권 현황,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등을 배경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의 역할과 비중 축소, 복지보조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책임 구분, 지방채 발행정책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수평적 재정 균등화 장치의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통합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미래

연구책임자 | 유재광

- 중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대외관계의 미래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에 관한 종합적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시작된 가파른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과 G-2로 대변되는 패권국으로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르게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한국의 입장에서선 너무도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매개로 경제성장의 큰 축을 의존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시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북한에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방 국가로 분류된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우며 서해와 이어도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으로 안보영역의 갈등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북핵 문제가 근원에 있지만 최근에는 사드 (THAAD) 문제로 한중관계가 격랑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경쟁 및 문화적 상징의 갈등 문제 등이 한중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미래를 연구하는 이유들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를 중국 정치의 미래, 중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중국 국제관계의 미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중국 미래에 관한 어떤 선입관이나 연역적 이론에 대한 가정 없이 중국 정치의 미래, 경제의 미래 그리고 국제관계의 미래를 사실에 기반해 예측한 후 이 미래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종합하여 중국이 향후 10년 국내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며 국제관계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패권추구형 국제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지만 이러한 팽창적 흐름은 국내 경제성장 흐름의 둔화로 전진과 후퇴의 악순환이라는 한계를 마주할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장기 대중국 전략으로 수출 의존도 줄이기, 북핵 관련 중국의 대북 제한적 영향력 인지하기 그리고 우발적 미·중 군사갈등 대비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연구책임자 | 유재광

- 유엔 PKO·안보리, IMF, WHO, UNDP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활동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이다. 본인-대리인 모델 (Principal-Agent Model)이라는 분석틀에 기대어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를 안보, 경제, 보건 그리고 개발 협력 분야로 나누어 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들-즉 유엔 평화유지활동 (UN PKO)과 안전보장이사회 (UNSC),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보건기구 (WHO), 그리고 유엔 개발협력기구 (UNDP)-에서의 한국 외교에 관한 분석-사례연구-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영역별 한국 국제기구 외교의 성과와 한계 및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로부터 개선 방안을 정책적 제언의 형식으로 도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안보분야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증가와 비상임이사국 2회 진출, 경제 분야에서는 IMF 분담금 증가와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서의 참여 증대, 보건 분야에서는 WHO와의 협력관계 공고화 및 새로운 감염병에의 선도적 대응 그리고 개발협력분야에서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과 이에 기반한 개발원조 비중 증대를 식별하였고 공통적인 한계점으로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위상에 못미치는 분담금, 국제기구 외교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 부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국제기구 외교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대안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중견국 한국의 위상에 맞는 좀 더 적극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며 이에 비례하여 늘어날 국제기구 외교활동에 대한 국회의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관리 감독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제반의 활동들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중일 복합갈등 :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박성준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에 안보, 무역,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세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및 동맹 결집을 통한 대결 구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오염물의 국경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세먼지, 방사능 물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2017년 사드(THAAD) 사태,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인 만큼, 이러한 갈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장에서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다른 분야 갈등과의 상호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최근 세 국가 간 나타나는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틀, 빅데이터(GDELT), 텍스트 자료(국내 언론 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틀은 정치적·경제적 갈등 요소가 각 국가 간 갈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빅데이터(GDELT) 자료는 경제보복이 일어나는 시기를 전후로 언론 기사에 나타난 어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국제정치학의 CAMEO 사건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한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국내 언론 기사는 환경 분야에서의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안보, 무역,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앞서 살펴본 세 국가 간 갈등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협력,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머징 이슈 분석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 김유빈

미래 환경 변화의 특성은 영향력과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패러다임, 메가트렌드, 트렌드, 패드, 이머징 이슈 등으로 구분된다. 패러다임, 트렌드 등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은 비교적 많은 연구를 통해 예측 및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머징 이슈는 불분명한 변화의 방향, 빠른 변화 속도, 합리적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응 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머징 이슈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여러 분야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이머징 이슈의 정의에 부합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고안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신기술의 발굴을 위해 이머징 이슈 탐색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어왔으나, 사회과학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미래 이슈에 대한 탐색 방법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머징의 여러 정의 중 우선 신규성과 확장성에 기반한 검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포괄적 사회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덴 클러스터(WoS Science 기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규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순간 급격하게 증가되는 패턴으로 정의하였고, 연도별 키워드의 분산과 평균 출현 빈도를 산출하여 신규성을 계산하였다. 또한, 확장성은 키워드의 출현 가속도 개념을 도입하여, 연도별 출현 가속도의 증감 변화에 따라 +와 - 부호를 갖는 일정 크기 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라이덴 클러스터 중 실제 분석에 활용된 클러스터는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분야 중 세 개의 클러스터를 선별하였다. 첫 번째 클러스터(#49)는 인적자원, 리더십, 직무만족, 조직혁신 관련이었으며, 두 번째 클러스터(#985)는 가족관계, 혼인, 육아, 이혼, 양육 관련 클러스터였다. 마지막 세 번째 클러스터(#1346)는 기후, 환경 변화에 관계된 클러스터였다.

이머징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 #49 클러스터에서는 혁신적 리더십, 직무만족도, 중재역할, 조정역할, 조직 시민권 행위 등의 이슈가 검출되었고, #985 클러스터에서는 관계의 질, 사회적 지원, 깨지기 쉬운 가족, 사회경제적 지위, 불안정성 등의 이슈가 검출되었다. #1346 클러스터에서는 토지 이용, 탄소, 사회적 비용, 바이오 에너지 등의 키워드가 신규성, 확장성 관점에서의 이머징 이슈 후보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이머징 이슈 정의에 따른 방법론 개발 연구 1단계에 해당하며, '21년 2단계 연구를 통해 인용기반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검출 방법론 및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단계적 연구를 통해 신규성, 확장성, 파급효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최종 이슈에 대해 전문가 검증을 거쳐 검출 방법론 및 도출된 이슈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범용 활용이 가능한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을 구현하고 공개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통합적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변화 예측

연구책임자 | 박성원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달리 사회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삶을 존속시키는 데 중요한 일과 놀이, 정치와 제도,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을 통합적 생태계로 묶고,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통합적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한 것이다.

노동 분야는 인공지능으로 탈고용, 고용불안의 가속화가 예상되었다. 놀이 분야는 연결의 과잉, 경쟁주의 지속, 차별의 재생산이 예상되었다. 주거환경 분야는 집이 지능형 주거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정치와 제도 분야는 감시 국가의 등장, 법원의 알고리즘 판결, 정치의 부숙화(진영논리의 극대화) 등이 예상되었다. 기후변화 분야는 인공지능기술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중장기 예측, 도시의 분산발전 수요와 공급의 조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사회변화 예측에서 국민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대응에 나설 수 있음이 전망되었다. 주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회적 인출권과 종업원대표제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놀이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기술 이해력의 강화, 편향적 알고리즘의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차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서 4가지 주요 문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등한 협업의 가능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가능성, 투명성 부여 등이 논의되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유빈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는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대응 정책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시범 실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매년 1건 정도의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용도, 평가방법, 평가주체 등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영향평가가 당초 목표한 평가 취지에 충실하도록 절차나 방법을 개선하여 그 활용도를 더욱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사례와 해외(미국, 유럽 등)의 사례 분석과 메타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의회 산하의 입법지원형이 아닌 정부 중심의 정책지원 목적으로 주로 수행되고 있어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는 갖는다. 행정부 산하 기관이 평가의 주체로 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STAA, 프랑스 OPECST 등 해외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의회의 기술영향평가 역할 강화, 시민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마련, 전담조직을 통한 평가체계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개별 기술 단위보다는 경제, 사회, 정치 등과의 상호작용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의제 등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혁신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검토도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ELSI/RRI 기반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여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RTTA)의 요소를 현재 기술영향평가에 보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동향분석, 호라이즌 스캐닝 등을 통한 의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가 논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논점을 추출하여 정책담당자,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으로 전파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결정과 조정을 수행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서 설치하고, 해당 조직 산하에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제도화하여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선정, 편성 등에 관여하도록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책 마련 및 미래지향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활성화로 과학기술의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연구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이슈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인간개발, 경제성장, 인구 재생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한국은 명시적으로 성차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계적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육아와 돌봄, 경력단절, 의사결정적 등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보이며, 영향력과 관련된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거시적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장기미래(2040년)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정책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의 분석 결과, 공적의사결정, 경제적 자원배분, 무급 노동의 분배, 성역할 규범 및 성차별 의식, 젠더 폭력 등의 분야에서 일부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한 결과 2020년 현재의 성평등 수준은 평균 31.1점으로 '약간 낮음'의 수준을 보였다.

거시적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등 정치영역과 가족의 변화, 저출산 등의 사회영역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었다. 반면, 기후변화와 재난 등 환경영역,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 악화 등 경제영역, 고령화 등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은 다소 엇갈린 전망을 보였다.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50점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공적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현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젠더 폭력은 가장 느린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평등 수준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해소, 돌봄의 재평가, 보편적 성평등 교육, 가족구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재생산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단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5개 영역에 대해 포용 민주주의,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 소득보장제도 재설계,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의 젠더 평향 해소,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등의 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입법, 제도화 방안 모색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가부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교류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 코로나19 이후 세계

연구책임자 | 박성원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적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팬데믹은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문화, 과학기술, 인구 증감 등에 전례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주제로 2000년 이후 4차례 발생한 세계적 감염병 이후 전 세계가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했다. 이는 세계가 공통으로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도 겪을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 준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신뢰와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가 팬데믹 극복의 핵심이라는 점, 사회적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학 조사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이 2000년 이후 세계적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배운 교훈이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SCOPUS DB에서 찾은 1800여건의 논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사건들도 면밀하게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인도에서는 공공보건의 위기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이 나타났다. 페루와 케냐에서는 방역을 위한 지역폐쇄 이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이 증가했다. 미국의 흑인들은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망과 관련 기업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 이후 긍정적 변화에도 주목했다. 사회적 약자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지역협동조합의 지역혁신, 일상 회복을 위한 과학계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은 세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미래를 전망하는 10가지 질문들을 통해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채정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530여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5~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중장기계획의 수가 워낙 많고 수립·집행 주기도 계획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중장기계획과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하여 중장기계획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대한 차이(Gap) 분석을 실시하고, 중장기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기 위한 행정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K-SDGs의 성과지표와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과정)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대상 AHP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3개씩의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SDGs 등을 활용한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표는 관련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비교뿐만 아니라, 지역(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각 중장기계획의 성과목표와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K-SDGs와 유사한 형태로 범부처 수준의 중장기계획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입하며, 일관성이 확보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회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행정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 김은아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그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을 개발하고, 메타평가 결과물이 국회가 관련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9년도 국회미래연구원이 도출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의 틀을 따르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과 유관계획 간의 정합성 평가에 적합하도록 평가 문항을 수정하여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평가하였다.

계획단위 메타평가 평가항목은 계획의 응집성, 계획의 추진체계, 연관계획 간 관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단위 메타평가 평가항목은 정책의 응집성, 정책환경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 추진체계, 연관 과제와의 관계, 환류 체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중장기'계획'과 그에 포함된 주요 '정책' 단위의 내용을 구조화된 평가 틀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구성 및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부처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차후에 정합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 성문주

본 연구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수립된 사회분야의 정부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환류로서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영역을 ① 노후소득보장, ② 사회서비스(건강 및 돌봄 보장), ③ 평생학습지원으로 도출하였고, 해당 영역별 법정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을 도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2016~ 2020)」을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사회서비스(건강 및 돌봄 보장) 영역에서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18~2022)」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을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하여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평생학습지원 영역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6~2020)」,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2017~2021)」을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으로 선정하였고,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영역(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타당성, 정합성, 실효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메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후소득보장 부문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정책목표 설정, 정책수혜자, 재원조달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초연금제도 효과분석, 정책 성과의 평가 및 반영을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 지속가능성 확보,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가,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치매 노인 발굴 및 보호를 중심으로 정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간 미스매치 문제,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생학습지원 부문에서는 정책수요자 요구와의 조응,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가,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수단 간 유사중복 및 상충 정도에 대한 정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메타평가 결과 및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국민들의 정책요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 제언하였다.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 과학기술 부문

연구책임자 | 여영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처별 광범위하게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 추진내용의 일관성, 장기적 시계를 고려한 대응 방안의 모색 등이 부족하여, 중장기전략의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집행체계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분석연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각 부처가 수립 및 시행 중인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내 다루지는 주요 의제 및 정책목표의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계획 간 상호 연계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시기별 중장기계획 주요 키워드 분석, 중장기계획의 최상위계획 반영 정도(정합성) 분석, 중장기계획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중장기계획 진화 계통도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내 정책구조 변화 흐름 및 계획수립 상 주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기준 및 방법(check-list)을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체계 측면의 정책문제 도출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메타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세 번째 연구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에 적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중장기 계획으로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대해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문제를 도출함으로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과제를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와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혁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행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계획 및 발전전략 사리에 적용함으로써, 행정부의 미래 준비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 차원 미래전략 추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연구책임자 | 박상훈

이 연구보고서는 국회 내 최대 직역(2,700명)을 이루고 있으면서 입법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존재인 의원실 보좌진과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협업 연구는 2019년 우수 연구모임이자 2020년 최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의회정치의 미래>와 함께 했다.

2천 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세우면서 이를 ‘이론 학문’이 아니라 ‘실천 학문’으로 정의하고 분류한 것을 상기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는 정치 분야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즉 정치적 실천가와 정치학 연구자의 분리나 단절보다는 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정치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정치학과 정치 내부자의 관점과 결합하는 것이 가치 있듯, 의회 전공 연구자가 의회 활동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국회 연구는 국회 밖 학자나 전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의원이나 보좌진은 연구의 대상이었지 주체는 아니었다. 일종의 참여 관찰의 방법으로 보좌진 스스로가 집필자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특별하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국회 내부자에 의한 국회 연구’의 최초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연구의 주제도 폭넓다. 내부자가 볼 때 민주화 이후 지난 34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국회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큰지를 다룬 1장에서부터 국회 내 젠더 대표성의 문제를 다룬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중요한 주제들이다. 밖에서 볼 때는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통칭되는 법안들이 안에서 보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쟁점 법안임을 분석한 것도 가치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새로운 제정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거부권 행사의 여지를 줄여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룬 것도 유익하다.

의원실의 회계 담당자의 관점에서 본 정치 자금 지출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도 처음 있는 시도다. 국회 안에서 미래 의제가 다뤄져 온 방식이나 보좌진의 총원과 승진 문제, 나아가 법사위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과 같은 주제 역시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주목할 수 없는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회 연구 수준의 질적 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연구책임자 | 박상훈

이 연구는 입법부로서 우리 국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민주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원인을 과도한 법안 발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그 원인과 결과, 나아가 개선 방안을 폭넓게 다룬다. 20대 국회(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의 20배, 독일의 60배, 영국의 90배를 상회한다. 우리보다 인구가 약 7배인 미국에 비해서도 2배이며, 일본보다는 60배가 넘는다. 어느 한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할 때, 그것만으로도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법안 발의만 아니라 제·개정되는 법률도 많다. 법안 가결/반영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소 21배(미국과 비교)에서 최대 172배(영국과 비교)에 달한다. 법안 접수와 가결, 반영 건수나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의회인 셈이다. 그간 우리 국회에 대한 처방으로 법안 가결/반영률이 낮으니 더 높여야 한다거나, 싸우지만 말고 일하는 국회 만들라 주문하는 것은, 일단 경험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법안발의가 가져온 문제점도 크다. 과도한 법안 발의와 통과에 매달리는 의정활동은 필연적으로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법안 발의 전 단계에서 법안 검토를 거쳐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의 수는 급격히 줄어, 공동발의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소 인원만이 참여하는 공동발의 법안 수가 13대 국회 11건에서 20대 국회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형식적인 요건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소위에 상정된 법안의 심사 시간도 계속 줄었다.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건당 평균 10분 남짓 심사해 9천여 건의 법안을 법률로 만드는 형국이었다.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여야 하겠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법안을 책임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법률로 만드는, '입법의 민주적 권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법안 발의 건수와 같은 양적 지표를 과용해 줄 세우기식 의원 평가를 반복하기보다는, '제1의 주권 부서'로서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권한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연구책임자 | 박상훈

이 연구보고서는 정치철학의 중심 분야의 하나인 수사학의 전통에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해, 수사학의 규범적 기준에 상응하는 정치인의 공적 언어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좋은 예를 발굴,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원한 수사학적 논의를 가져와, 규범적 판단의 풍부한 준거들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학의 전통이 중세 초에 끊어지고, 근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작문과 시 작성에서의 표현 기법에 대한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고전 시대 수사학의 전통은 여전히 정치철학의 학 분야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1장은 정치철학의 한 분야로서 수사학의 핵심을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장은 공적 언어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의 연설을 소재로 수사학적 표준이라 불릴만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 분야를 대표하는 것은 고대 페리클레스와 현대 링컨의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과 150년 전에 있었던 링컨의 연설을 중심으로, 그리스 시대 수사학이 2천 년을 가로질러 발휘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 또한 살펴본다. 그밖에 2차대전 중에 있었던 처칠과 드골, 루스벨트의 연설에서는 두려움에 맞선 명예와 용기, 위대함과 희생과 같은 로마 공화주의의 덕목을 볼 수 있다.

제3장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살펴본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그는 '현대판 키케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인종차별이 심한 것은 물론 전체 유권자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연설의 힘'에 있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오바마의 정치 연설이 갖는 수사학적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연설을 살펴본다.

2019년 1월 4일에 구성된 뒤 16번의 공청회, 6번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10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 3월 10일 하원 결의안과 2020년 10월 31일에 최종보고서를 낸 미국 하원의 특위(Select Committee on the Modernization of Congress)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정치 언어 교육을 강조하며 '의회리더십아카데미'(Congressional Leadership Academy)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하원선거일과 하원의원 취임일 사이의 총 57일 중 가운데 2019년에는 18일 동안 초선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보고서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

연구책임자 | 박상훈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의원들 사이의 자율적 행위 규제 원리로서의 수많은 규범 형성 노력이 있어 왔고, 이를 어기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그 핵심은 의원 자치 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실증하는 데 있다.

의원품위규칙(Rules of Decorum) 내지 의회 토론 시 준수해야 할 품위규칙(Rules of Decorum & Debate in the House)에서 보듯, 의원들의 정치 행위나 언어 사용에서 중시해야 할 규범성은 오래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그 핵심은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은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밖 외부자나 외부기관에 의원의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에 어느 나라 의회든 매우 신중하다. 면책특권을 갖고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입법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외적 규제나 제재의 대상으로 여겨 온 기존의 법·제도 중심의 접근과 그 실효성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그간 ‘윤리특위 상설화’나 ‘윤리심사위원회 구성의 비당파성 조항 신설’,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강화’ 등이 제안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보다는 1992년 제정된 이후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온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노력에 의원들 스스로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연구책임자 | 박상훈

이 보고서의 목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를 비교 연구의 기반 위에서 다루는 데 있다. 유럽의 정치 갈등은 주로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의 문제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 갈등은 새로 등장한 정당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상위 1, 2당 사이에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양당 혹은 양대 진영 사이의 양극화된 갈등을 가리키는 말이 정치 양극화다.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유럽의 다극화된 정치 갈등 유형과 비교되는 양극화된 양당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정당 간 이념적 차이의 심화’에서 찾았던 기존 연구에 대해 이 보고서는 비판적이다. 문제의 원인을 정당 간 이념적 차이의 심화에서 찾게 되면 정치 양극화의 대안은 자연스럽게 ‘중도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즉 이념적 양극화는 실증적으로 지지될 수 없고 정치의 중도화라는 대안은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 간 이념적 거리나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보다 ‘권력 자원’(power resource)을 두고 양당이 서로를 배제하려는 열정에서 발원하는 바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정당 간 합리적 차이가 더 중요해지는 방향의 변화, 즉 비슷해지고 가까워지는 중도화보다 이념적, 정책적 다원화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제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멀리 보려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긴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관점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방안이나 제도 같은 것에 대한 헛된 기대 대신, ‘오래 걸리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변화’를 제안한다. 정당정치는 어떻게 발전하고 그것은 왜 오래 걸리는지, 당정관계는 왜 책임정부론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는지, ‘청와대 정부’와 같이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감이 의회정치를 지배하게 하면 왜 안 되는지 등의 문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 과제

연구책임자 | 박상훈

이 연구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국회미래연구원의 협업에 의해 추진되었다. 협업의 주제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발표와 토론에 나선 협업 연구자들은 ‘혁신적 포용역량에 바탕을 둔 평생학습 사회 구상’을 두고 다양하고도 풍부한 내용을 교환했다. 학습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의 비전과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역량발달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구체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는 일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과 함께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업을 동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학교 교육 관련 법령 개정,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정,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과제를 모색했다는 점 또한 이번 협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에 맞는 인재육성과 일자리 전환 정책도 포괄할 수 있는 토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성과는 더욱 미래지향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협업의 성과는 정당을 초월하여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21세기는 4차산업 혁명과 고령화 혁명이라고 하는 두 혁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인재 육성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 이번 협업의 성과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육성정책의 방향에 공감대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

국가의 민주적 질 제고를 위한 개혁

연구책임자 | 조인영

본 보고서는 입법부의 기능 강화,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 능력 강화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목표하에, 국내 정상급 학자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된 편저이다.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변화한 환경 아래서, 민주적 문책성 강화와 거버넌스의 효과성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하여 신생 민주 국가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혁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 기능 강화 및 행정부 통제 능력 향상, 행정부의 정책역량 증진 및 수직적, 수평적 책임성 확보를 도울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입법부-행정부 관계,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독립행정기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입법부-행정부 관계와 관련, 3장은 한국 국회의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입법 지연현상을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4장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행정부-의회 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대통령 어젠다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정책적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와 관련, 5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분권의 구조를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분권이라는 과제가 과연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과제인지, 분권의 현재와 미래 쟁점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6장은 지방분권과 행정기능의 재조정에 관한 연구로, 행정의 기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의 협력을 통해 재편하고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관리의 패러다임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국가행정의 체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독립행정기구와 관련, 7장은 독립행정기구에 관한 연구로, 합의제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행정기구의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균형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합의제 규제 기관이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재균형화에 적합한 거시제도적 재설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

연구책임자 | 이선화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다변화됨에 따라 정부 간 정책 권한 배분의 문제, 즉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의사결정이나 공급 방식 및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을 매개로 한 복지지출의 확대로 지방재정의 양적 규모는 커졌으나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의 일종으로 공유자원(common pool) 문제, 부문별 예산 칸막이 등과 같은 재정 비효율화 문제를 내재한다. 실질적 재정분권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보조사업의 확대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제도와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분권형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복지보조사업의 기본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의 중층 구조에서 국가-지방 수평 협력 구조로 전환하는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 재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분권형 분담체계에서 중앙정부는 전국 표준화가 필요한 현금급여 사업을 전담하고, 지역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현금급여를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재편안은 재정 중립 관점에서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는 중앙재정에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고 다른 기능(환경, 국토, 문화 등)에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복지와 교육 기능의 재정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지방세의 7:3 조정 과정에서 현금급여성 복지비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세입 감소분을 총당해 주는 세입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복지는 중앙, 교육은 지방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셋째는 '현금급여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지방'이라는 원칙하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범위 내에서 재원을 자체 조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 사례로, 국지적 맞춤형 대응이 요구되는 아동·청소년 사업과 보육서비스는 지방재정에서 전담하는 한편, 전국 표준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노인·장애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중앙-지방 간 복지 빅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국고보조금 체계를 특정보조금에서 동일한 부문끼리 묶어서 통합하는 가칭 '부문형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유사 목적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하여 당초 '목적보조금'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내부에서의 자원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여영준

현재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 국가로서, 해외 선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 데 특화된 기술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 추격형 발전모형에 내재한 혁신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기술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여 지속적인 진화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다양성 확대를 바탕으로 한 혁신생태계의 역동성 강화와 외부효과 창출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 내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기업가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활동 진화과정을 정량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고자 했다. 세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수준별 기업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총요소생산성 성장을 분포와 진화패턴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생태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기업가형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고성장이론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세부적으로 해외 정책사례 탐구 및 데이터 기반 스케일업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생태계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을 이뤄내고자 하였다. 또한, 세 번째로 혁신체제의 전환에 제약이 되는 정부 혁신정책과 기업지원체계의 주요 제도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정책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투자 및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기업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 국가 미래 혁신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학습역량 전환과 혁신체제 내 전반의 기술학습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혁신체제의 전환 지향점으로서 기업가형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를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제도화 방안 및 정책개혁 과제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채정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비롯한 개인적 인간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화의 대표 사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정부의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 수준이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혹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행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인구구조 변화와 거주지 분포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자원조달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직접성을 갖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창출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시군구 중 48.0%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주거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45년을 기준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대구, 인천, 경기, 세종, 제주는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의 불평등 연구

: 노동시장 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국회미래연구원

이 보고서의 I부는 한국 노동시장분절을 성별, 고용형태,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노동의 불평등을 살펴보았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노동불평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의 분절은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진행되었고 고용형태, 기업규모, 직종, 업종 등에서 노동시장의 이중적 분절과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성별, 고용형태, 기업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노동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격차가 나타나 다층적인 노동불평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의 다층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노동불평등의 해소 또는 완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산업생태계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어, 로봇과 자동화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문직과 숙련직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고용문제가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될 가능성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확산될 것을 예측하였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 관련, II부에서는 자산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자산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전체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의 3분의 1에 그쳤으며, 큰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DB의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매매 건수, 평균 거래가격, 그리고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니계수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부동산 불평등의 변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형복합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가 소유 여부는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가 소유 가구와 전월세거주 가구 간의 행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경우, 자가 거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안정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 :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조인영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악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불평등이 반드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불평등이 높았을 때 저소득층의 정치참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정치참여율을 보여주는 여러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추이 및 투표율과 집회 시위 현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갈등이론과 자원이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갈등이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자원이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가설 중, 데이터 분석 결과 무엇이 더 타당한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위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사용한 미시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시민들의 정치참여 간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때 투표나 비선거적 정치활동 모두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조금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불평등의 결과로서 저소득층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제언으로 1) 저소득층 투표 비용 완화, 2) 정치에 대한 관심 유도, 3) 비례대표제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저소득층의 대표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선발전 기준 중 하나로 소득계층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저소득층 출신 혹은 저소득층의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선화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 부동산 부문을 안정화하고 자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부/소득 배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성숙도가 높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특히 토지자산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 0.607에서 2018년 0.670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정보를 재산세 행정자료의 부동산 분포 통계로 보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20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970~2018년 OECD 16개국의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함께 부동산가격 변동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소득·자산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유세의 기능과 세제 특성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의 점진적 인상을 부동산세제의 중장기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라는 제한된 틀이 아닌 조부유세 제도로 보유세를 전면 개편할 것인지는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다만,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가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평가가격의 공정성 확보, 조세의 투명성·직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보유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체계가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평가 및 분리과세 방안을 통해 동일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한국인 남녀의 노화 연구 : 생체 적응 부하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허종호

고령화 정책에 있어 연령 및 성에 특화된 정책 및 생애 주기적 접근이 미흡하다. 특히, 인구집단 수준에서 나이에 따른 남녀 간 다른 생물학적 노화 과정의 궤적을 파악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축적된 국가대표성을 갖춘(nationally representative) 데이터를 활용, 객관적인 생물학적 노화 지표인 생체적응 부하(allostatic load, AL)를 사용하여, (1) 지난 20년간 남녀 간 건강격차의 추세를 확인하고, (2)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최선의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모델링(Hierarchical Age-Period-Cohort modeling)을 통해 연령과 기간, 출생코호트에 따른 남녀 건강의 격차를 분석하고, (3) Oaxaca-Blinder decomposition을 이용하여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생체적응 지표의 자료원으로 가장 많은 지표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고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모델링(HAPC modeling)의 활용하여 연령, 기간, 출생코호트의 영향력을 분해하고 아울러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방법으로 남녀 건강격차에 기여하는 요인과 크기를 분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건강이 안 좋았다. 둘째, HAPC 분석 결과, 남녀의 건강 추세와 궤적이 연령, 기간 및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하였다. 분해 분석 결과, 사회 경제적 특성 및 건강 행동 요인이 남녀의 주된 격차 기여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시의적인 예방 및 중재적 개입 시기를 제안하였다. 특히 건강과 노화에서의 APC 연구를 기반으로 출생코호트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연구책임자 | 민보경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의 가치관을 추척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치관의 흐름을 추척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미래 이슈들을 예측하고,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5,321명이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 이미지는 희망적이지만,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대와 20대 집단에서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으며, 60대 이상,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정성에 관한 4개 조사항목 모두 30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약간 나아지더라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세대간 비교를 통해 다른 집단과 차별화된 미래세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세대는 여가를 중요시 하며, 직업선택 기준으로 개인 적성이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래세대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기성세대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정책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행복도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조사를 통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세대별, 이슈별 복잡한 가치체계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공동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향후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인의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공론조사

연구책임자 | 박성원

이 연구는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국민이 도전분배사회라는 미래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미래였다. 이 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과제는 설문화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조사 결과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보다 대도시 중심의 소비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도시 내에서 탄소의 감축과 흡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노동분야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직업 안전성을 전제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청년보다는 노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는 사회적 돌봄의 공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공동체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조사를 실행하면서 노동정책과 교통정책에서 국민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발견했다. 먼저 노동정책에서 포괄적 안정화 정책과 유연화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의견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또한, 교통정책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수소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물었을 때에도 국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민은 유연화정책보다는 포괄적안정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교통정책에서 국민은 10년 내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수소차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선호했다. 이처럼 친환경차가 미래에 많이 등장할 때 우리는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 공유경제의 확산, 주거와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인의 행복조사연구 (예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 허종호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한국인의 행복 조사연구」를 통해 ①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4일~12월 18일까지 1만 3,824명 (6,857가구)에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7.83점,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0~10점 중 평균 7.51점, 어제의 행복감은 평균 7.57점, 어제 미소 및 웃음 정도는 평균 7.48점으로 행복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5년 전 삶의 만족도인 평균 7.42점에 비해 5년 후 삶의 만족도 평균 7.96점 (10점 만점)으로 앞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행복 취약계층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을 문제를 확인하였다. 행복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주로 60대 이상, 사별/이혼/별거, 월세/사글세/무상 거주, 1인 가구, 중졸 이하, 무직, 노동시간이 주 단위 50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저소득 가구 및 개인,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 집단). 정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등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유지 지원을 통해 행복을 향상할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의 건강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이들의 삶에서 질적인 건강 증진을 유도할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사는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국회 입장에서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국가 대표성을 갖춘 설문 조사를 통해 향후 명실상부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유일한 대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원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3.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작성자 : 김유빈(연구지원실장)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13대 분야로 구분한 뒤 전문가 150여 명이 미래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도출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43개 정책과제를 도출했고, 최종적으로 의원실 설문조사를 통해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선별했다.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작성자 :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국민이 원하는 선호 미래를 조사한 결과 '보존분배사회'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존분배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적 성장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도전과 변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분배와 협력을 추구하는 도전분배사회이기도 하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원이 지난 2019년 11월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과 속의토론을 진행하고 6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2050 대한민국미래와 정책의제

작성자 : 김홍범(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범 前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휴먼을 다룬 5개 영역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년의 대한민국 미래시나리오를 조망했다.

김홍범 박사는 종합미래예측연구를 통해 다양한 미래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이슈들이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도출을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쇠퇴, 지속 성장, 전환 미래시나리오와의 갭(GAP) 분석을 통한 50대 지향, 대응, 회피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4 더 많은 입법이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작성자 :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①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②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③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작성자 : 김현곤(원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①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②사람들이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 ③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④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 ⑤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 ⑥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작성자 :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정영훈(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 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난해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사회를 위한 공론조사를 실행한 데 이어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선호조사를 올해 10월 실시했다.

본 국민 선호조사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수단,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사회갈등 관리, 다양한 가족 형태 등 11개 주제별로 2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물었다.

각 정책대안별 국민의 선택을 종합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변화의 주체는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감염병 대응, 혐오 처벌,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복지정책에서 국민은 특정 연령층과 계층보다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비교를 중심으로)

작성자 :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김은아 부연구위원은 2020년 과제인 기후변화 미래사회 영향 대응 전략 수립 기반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대비 현황을 ①연구 ②행정부 정책 ③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본 브리프에서는 관련 문헌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정의하고 종의 이동, 보건정책,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대비도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연구주제와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작성자 :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작성자 :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과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사회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 간 교류 등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 (사회과학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발발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가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 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0. 9. 3
3	2050 대한민국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 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정영훈(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1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작성자 : 유재광(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마주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즉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속에서 한국이 안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경쟁 심화가 한국 안보의 관련 주요 이해관계 당사자—즉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들 국가별 맞춤형 중장기 안보전략을 개발한 후 이 전략들이 어떻게 향후 한국의 중장기 안보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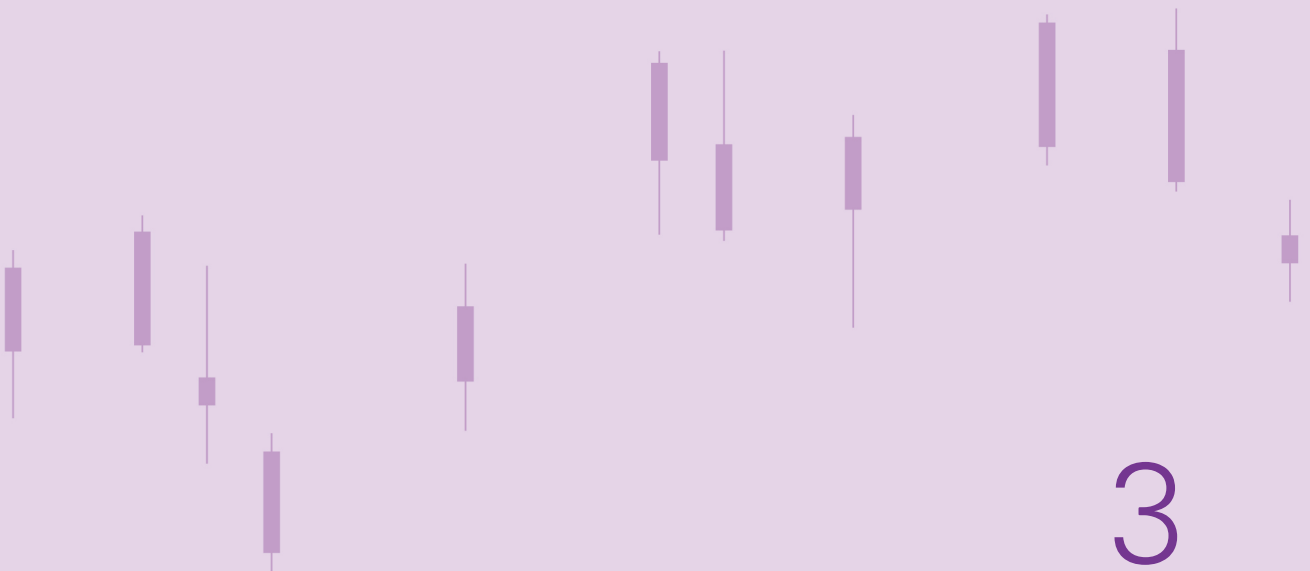
2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작성자 : 유재광(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뉴 노멀이라는 환경적 제약하에서 한국의 경제적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전략적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대외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이 환경제약에 현명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국제 통상, 금융, 통화 그리고 개발원조 분야에 걸쳐 도출하고 이것이 중장기 한국 경제이익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그 효용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9.24
2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05





3

연구 외 활동

1. 주요행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

'20.5.26

국회미래연구원은 개원 2주년을 맞아 국회 내외의 주요 인사 참석을 통한 축하 및 격려와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국회미래연구원의 2주년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미래연구원이 성장을 거듭하여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데 큰 임무를 수행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장 이취임식

'20.6.1

국회미래연구원은 김현곤 제2대 원장 취임식과 함께, 박진 초대원장 이임식 및 초대 임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선옥 미래연구원 초대이사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김승기 국회사무차장 및 초대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김현곤 원장은 취임사에서 “미래연구원이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의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 역할 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MOU 체결

'20.7.2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및 미래역량의 개발을 위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유·무형 자원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현곤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미래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 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실질적인 연구협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 의원·양향자 의원·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

'20.7.15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코로나노믹스 △4차 산업혁명 △ICT △청년 벤처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했다.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포럼

'20.10.29

국회미래연구원은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 경제 방향 및 전략'에 대해 다각도에서 논의했다. 김은아 부연구위원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도시전략' 과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현곤 원장은 “포럼을 통해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경제의 역할과 현황을 진단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여 추후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 : 2030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20.11.6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Predicting the Futures of Northeast Asia, 2030)'를 주제로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6자회담 참여국의 2030년 외교·안보 정책 기조 예측'과 '2030년경 동북아 외교·안보 미래 중 가장 가능성이 높거나 가장 선호하는 미래는? 두 개의 미래 중 갭이 존재할 경우, 선호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 6자 회담국에 추천하고픈 외교·안보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포럼-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 '20.11.12

국회미래연구원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미래연구원과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시도연구원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축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여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촉식 '20.11.27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아젠더를 발굴하는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촉식을 11월 27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의장 자문기구로 구성된 것으로, 국회 차원의 국가중장기 아젠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본 행사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위촉식 및 기념촬영,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기재부·KDI와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공동

'20.12.04

국회미래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전례 없이 중요해짐을 고려해 '초불확실성 시대: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와 함께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개회사, 김현곤 원장 및 최종표 KDI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3개 정당정책연구소와 온라인 공동세미나

'20.12.22

국회미래연구원은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인 미래연구원과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2. 기고문

[기고문(미래기고, 미래생각)]

미래 예측과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정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가 제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 기고문의 형태로 소개하는 '미래기고'와 매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뉴시스와 공동기획을 통해 게재하는 '미래생각'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미래기고 총 28회, 미래생각 총 51회를 연재하였다.

■ 2020년도 미래기고 현황 ■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1	국제환경분쟁과 미래	김성진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전임연구원)	20-01-02
2	4차 산업혁명과 향후 한국교육의 방향	이성호(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01-08
3	중공몽이 완성되는 2050년 중국의 미래는	함명식(중국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부교수)	20-01-21
4	미래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20-01-30
5	이공계 연구직의 현재와 미래	권기석(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20-03-05
6	'어벤져스'에서 읽어보는 미래와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	허은녕(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20-03-16
7	전염병의 파괴력과 다자주의의 위기	이신화(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3-27
8	총선이 끝나고 : 젊은이들의 선택과 미래를 위한 단상	박순애(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4-16
9	감염병 확산下の 아주 가까운 미래	황석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4-22
10	코로나 대응 정보기술 활용법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	20-05-07
11	기본소득이 풍요로운 미래에는 사회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5-14
12	“포스트 코로나19 세상에서는 새로운 인간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만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20-05-29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13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용상(영남대학교 조교수)	20-06-29
14	상처 난 인간의 자존심	이영탁(세계미래포럼 이사장)	20-07-28
15	미래의 가치를 향하여	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20-08-20
16	지나간 미래의 안전과 다가올 과거의 위험	정익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8-27
17	교육과 빅데이터	이용상(영남대학교 조교수)	20-10-15
18	코로나가 가르쳐 준 미래 생존법 '성찰과 공존'	곽노필(한겨레신문 선임기자)	20-10-21
19	대한민국 시민사회, 그 위대함에 대하여	문정호(국토연구원 부원장)	20-10-27
20	국제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성적표	허은녕(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1-05
21	노회찬의 미래공부 습관	안병진(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20-11-12
22	코로나 이후, 완전한 디지털 사회!	이승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20-11-19
23	COVID-19 시대,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권기석(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20-11-26
24	확정적 미래, 초고령 사회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 시급하다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2-03
25	미래 정책시스템의 틀: 격변과학기술에 대한 신중한 경계	김태윤(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2-10
26	코로나19 시대에 생각하는 행복과 삶의 질	변미리(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장)	20-12-17
27	바이든 대통령 집권과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	함명식(중국 지린대학 공공외교학원 부교수)	20-12-23
28	인구감소시대 소멸위험 지자체의 생존전략	최진호(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20-12-30

| 2020년도 미래생각 현황 |

회차	기고자	제목	게재일
1	조인영	AI 의사와 의사의 사명감	20-01-02
2	박성원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미래	20-01-09
3	김홍범	민간 중심의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 확립	20-01-16
4	유재광	전쟁의 진화 : 2차대전에서 드론암살까지	20-01-22
5	정영훈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20-02-06
6	민보경	‘나 홀로 가구’ 시대 전략	20-02-13
7	김유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융합의 모색	20-02-20
8	이채정	라떼는 말이야	20-02-27
9	이선화	포스트 발전국가의 대안적 국가발전모델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20-03-06
10	박상훈	토머스 홉스의 주권론	20-03-12
11	박기태	코로나, 일-가정 양립, 그리고 리더십	20-03-19
12	성문주	일 몰입과 개인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20-03-26
13	박성준	코로나, 사회적 혼란, 그리고 정부의 역할	20-04-02
14	김은아	기후변화와 전염병, 그리고 나비효과	20-04-09
15	여영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의 역설 :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또 다른 충격	20-04-16
16	박성원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변화	20-04-23
17	김홍범	미래 준비를 위한 범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20-04-29
18	유재광	코로나 이후의 국제 질서: 감염병의 정치(政治)화	20-05-07
19	정영훈	우리는 고용사회를 넘어설 수 있을까?	20-05-14
20	김유빈	감염병과 정보	20-05-21
21	민보경	새로운 도시살이에 대한 소고(小考)	20-05-28
22	이채정	코로나 시대의 정치 그리고 정책: 제21대 국회에 진중한 거리감을 요청하며	20-06-04
23	이선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재정 관리를 위하여	20-06-13
24	박상훈	존 로크의 시민 정부	20-06-18
25	박기태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20-06-25
26	성문주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20-07-02
27	박성준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	20-07-09

회차	기고자	제목	게재일
28	김은아	2020 이후 그린 뉴딜의 성공을 기원하며	20-07-16
29	여영준	뉴딜(New Deal)이 대전환을 위한 빅딜(Big Deal)이 되기 위한 조건	20-07-23
30	조인영	전문성과 민주성의 균형	20-07-30
31	박성원	블랙미러와 미래공포	20-08-06
32	김홍범	R&D, 비R&D의 통합 예산 검토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8-13
33	유재광	'팬데믹과 불안한 중국의 미래'	20-08-19
34	정영훈	직업선택의 자유의 미래	20-08-27
35	김유빈	반도체 산업의 미래	20-09-02
36	민보경	빈집 채우기, 도시 살리기	20-09-10
37	이채정	돌봄의 균형을 향하여	20-09-17
38	박상훈	국회의원의 말	20-09-23
39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안하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의 틀	20-10-07
40	정훈	우리시대의 관성	20-10-15
41	성문주	미래교육 전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로 나아가길	20-10-21
42	박성준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20-10-27
43	김은아	순환경제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원칙	20-11-05
44	여영준	정부신뢰 확보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기회와 조건	20-11-12
45	조인영	증거 기반 정책 마련을 위한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	20-11-19
46	박성원	불확실성만 키우는 예측 편향	20-11-26
47	김유빈	대형연구시설 구축 프로젝트의 근본적 체질 개선	20-12-03
48	민보경	코로나가 쓰아올린 도시생활의 변화	20-12-10
49	이채정	저출생 적응 시대의 사회정책	20-12-17
50	박상훈	누가 정치를 사납게 만드는가	20-12-23
51	이선화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단상	20-12-30

3. 언론보도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언론홍보 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성과, 행사 등을 언론사와 공유했다. 이에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다양한 언론사가 연구원과의 협업 및 연구성과 활용을 통해 다수의 기사를 보도했다.



■ 연합뉴스 tv스페셜(2020.06.14) ■

■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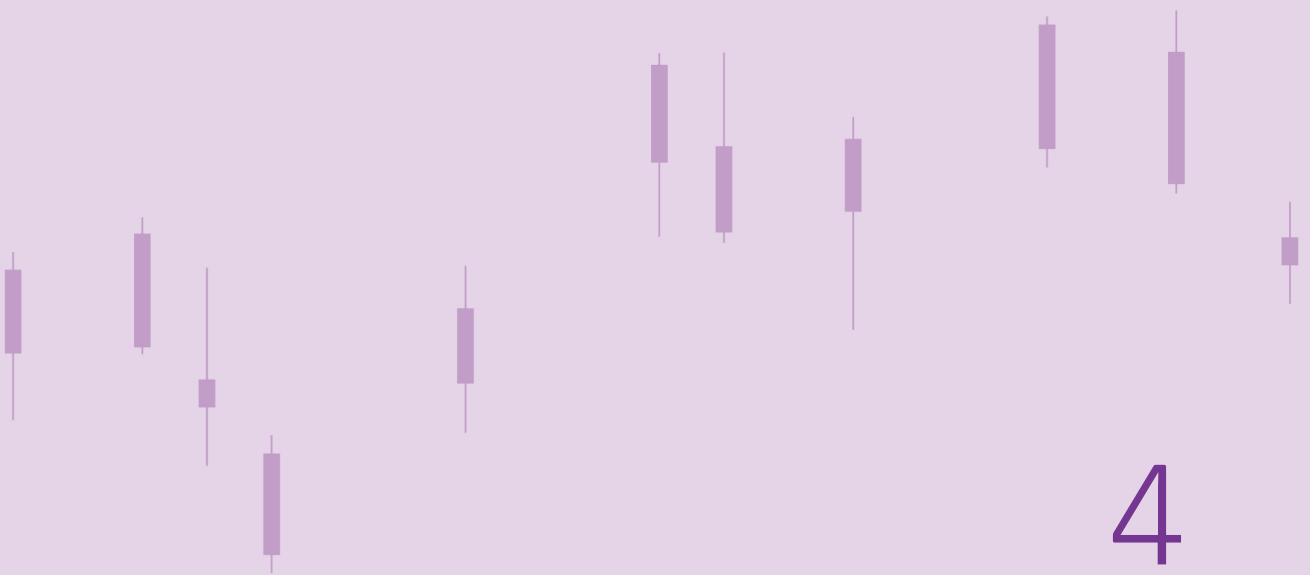
매체명	주요내용	보도일
중앙일보	국회미래연구원·중앙일보 공동기획 '21대 국회에 바란다'	20-05-06~ 20-05-27
한겨레	기후·에너지·식량... '지금 이대로' 물려주기엔 미안한 대한민국	20-08-12
	국회미래연구원, 행복의 개념화·지수화 시도한 국민행복지도 그려	20-09-03
경향신문	밀려오는 '언택트', 밀려나는 노동	20-05-02
	[아침을 열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20-08-24
서울신문	[칼럼] 재난의 시간, 정치와 언론은	20-08-18
세계일보	10명 중 8명 "시시대, 빈부격차 더 벌어질 것"	20-06-03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뉴스레터) 발송

연구원의 연구성과, 기고문, 주요 소식 등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정책고객에게 발송하였다. 2020년은 총 51통의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발송 완료하였다.







4

부록

국회미래연구원 2021년 연구과제 목록

중점연구사업부문 : 10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 미래예측 및 분석	1.1.1. 이머징 이슈 탐색 방법론 고도화 및 주요 이슈 전개 예측	박성원
	1.2.1. 불평등과 교육: 계층이동성 향상을 위한 제언	성문주
	1.2.2. 기후위기 대응 산업지원 입법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	정훈
	1.2.3.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 연구	여영준
2.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1.2.4.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 연구	이채정
	1.2.5.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거버넌스 연구	박상훈
	1.2.6.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이선화
	1.2.7.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김유빈
3. 국제전략	1.3.1. 미·중 갈등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회의 역할	박성준
	1.3.2.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아젠더 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차정미

연구기반사업부문 : 4개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과제	책임자
1.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2.1.1 한국인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	허종호
	2.1.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박성원
	2.1.3 미래사회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민보경
2. 미래이슈 탐색연구	2.2.1. 연구진의 전문역량 제고 및 향후 중점연구 기획을 위한 탐색연구	김유빈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